

북핵 협상과 국제 공조

이 상 현 /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북핵 문제 현황 : 새로운 시작인가?

6자회담의 경색국면이 오래 이어지면서 관련국들은 6자회담 재개의 모멘텀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은 6자회담 조기 재개를 통해 천안함 이후 연평도 사태까지 이어진 수세국면을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은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처음 시작, 6차까지 진행된 회담을 통해 2004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등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08년 12월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6자회담은 기한 없는 휴회에 들어갔다. 뒤이어 2009년 4월의 장거리로켓(은하2호/ 광명성2호) 시험 발사, 핵시설 원상복구 및 영변 주재 IAEA 감시요원 추방, 그리고 5월의 제2차 지하 핵실험으로 북핵 문제는 다시 미궁에 빠져든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미중 정상회담(2011. 1. 19)에서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게 9.19 공동성명 준수를 촉구한 만큼, 조만간 관련국들간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망이 그다지 밝은 것은 아니다. 특히 지난해 말 다시 불거진 북한의

우라늄농축 시설 공개는 북핵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작년 11월 북한은 미국의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등 스탠포드대 일행에게 영변 핵단지 내 최신 시설을 갖춘 고속 원심분리기 2,000기 규모의 우라늄농축 공장을 공개했다. 동 시설 건설은 1992년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3조의 중대한 위반이며, 이는 북한이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사태이다. 해커 교수는 작년 11월 20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영변에서 수백 개의 정교한 원심분리기가 초현대식 제어실에 설치돼 있는 것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고, 북한은 해커 교수에게 원심분리기 2천개가 이미 설치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작년 11월 2일부터 5일간 북한을 방문했던 잭 프리처드(Pritchard)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변에서 만난 북한 관리가 100MW 규모의 경수로를 건설 중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 관리들의 안내로 영변지역을 둘러본 프리처드 소장은 이날 북한이 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소개한 곳은 과거 냉각탑이 있었던 곳의 바로 옆이라며, 그곳에서는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을 세우는 초기 단계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영변 우라늄농축 공장 규모(HEU 40kg 규모)만 보더라도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있는 HEU는 이미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히로시마 초기형 우라늄탄의 경우 25kg 정도의 HEU가 필요하지만, 북한이 이미 정교한 기폭이 필요한 플루토늄탄 실험을 두 차례나 마친 상황에서 내폭형 디자인(implosion-type design)을 확립했다고 보면 10kg 이하의 HEU를 가지고도 핵폭탄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변 시설을 통해서만 연 4개 정도의 핵폭탄 재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지역의 비밀 시설을 고려할 때 핵폭탄 양산 규모로 이미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농축우라늄 양산체제로 돌입한 것은 북한 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뜻한다.

천안함 · 연평도 도발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

2010년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약 2.5km의 우리 영해에서 초계작전 중이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하여 침몰시켰다. 우리 해군장병 46명이 전사한 이 도발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었고, 7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와 공조한 우리의 대북 조치에 대해 전면전, 3차 핵실험을 운운하면서 위협하였다. 11월 23일에는 연평도의 해병부대와 민간인 거주지에 무차별로 170여 발의 포격을 자행하였고,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하였다. 이 도발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러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민간인까지 살상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은 북한정권의 폭력성과 더불어 한반도가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한 등거리 입장을 유지해오던 중국이 북한 감싸기로 돌아서면서 동북아는 'G2 시대'의 그늘을 체감하는 시대로 돌입했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분명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부터 남북 간 대결은 점차 미중 대결 국면으로 변지는 양상이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북중은 대놓고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안방에서 군사훈련을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한미의 전쟁 소동'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천안함 국면에서 탈피하기 위해 중국이 확실한 우방이라는 사실을 한미에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고, 중국도 북한을 매개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욱 긴밀해진 북중관계의 틀 속에서 문제를 봐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김정일 위원장은 2010년에만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북중관계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다. 김정일의 방중 이후 북중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행보에서 드러나듯이 향후 북중 간에는 경제교류의 심화가 예상된다. 그 이유는 중국의 동북3성(지린성·헤이룽장성·랴오닝성) 개발과 북한의 이익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미중관계 변화와 6자회담

당분간 국제정세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미중관계의 변화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갈등과 협력 속에 선부른 전면 대결이나 충돌은 피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미중관계의 전반적인 유화적 기조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급격한 군사 현대화 추세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 군사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중국이 인도양, 서태평양 지역까지 군사전략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 양안의 경제교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 중에서도 접근 차단(anti-access) 및 지역 거부(area-denial)에 중점을 둔다고 평가한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2010년 2월에 발표된 오바마 행정부의 『4개년 국방 검토(QDR)』 보고서는 지역 정세와 관련해 전진 배치, 재래식 전력, 핵 억지 등을 포함하는 ‘지역별 맞춤형 억지 체제(regionally tailored deterrence architecture)’를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자국의 해양방어선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확장하고 있다. 동중국해는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문제인 센카쿠열도(釣魚島·다오위다오)를 두고 충돌이 계속되는 지역이다. 또 남중국해에서는 남사군도(南沙群島)나 서사군도(西沙群島)의 영유권 및 석유·천연가스 개발을 둘러싸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작년 3월 중국은 남중국해의 해양 권익을 대만

이나 티베트 문제와 같이 주권·영토와 관계되는 ‘핵심 국가 이익(core national interests)’이며,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해양 팽창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 아시아 관여정책은 한국의 입지를 마치 고래싸움 속에 낀 새우처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이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협력적, 건설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군사·경제·무역·에너지·대테러 등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로서 관심이 큰 부분은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양 정상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등 민감한 이슈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나타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이스트룸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은 중지돼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국제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 주석은 “우라늄 문제, 안보 문제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해 우라늄 부분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예상대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돌파구나 구체적 해법을 마련했다기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 원론적 목표를 재확인하고 우선 대화를 위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데 원칙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일단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강조된 것은 긍정적 신호이지만, 최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행태를 보면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아직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북의 연평도 공격에 대해서도 남북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천안함·연평도에 관한 기존 입장이 바뀐 흔적이 없다. 또한 지난 1월 14일 중국 외교부의 추이텐카이 부부장은 “중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본적이 없다”며 “아직은 분명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해, 북한이 작년 11월 잭 프리

처드 한국경제연구소장과 핵 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한국의 대응 과제

한국의 대응에서 핵심은 역시 국제공조, 특히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공조의 강화이다. 이런 의미에서 작년 12월 6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의 외교장관 회담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은 한·미·일 3각 연대의 강화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회담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은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실히 응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제재와 함께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양면전술(dual track)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단순히 6자회담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제재를 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향후 대북 비확산 외교가 긍정적 진전을 보이거나, 혹은 퇴보하는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도발 행위 중지, ▲역내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 ▲9·19공동성명에 입각한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적 의무 준수 등 5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은 수세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연초부터 대남 평화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남 대결 해소’를 내세우며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1월 5일에 발표된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에서는 ‘당국 간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그리고 8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통해 남북 당국간 회담을 ‘무조

건 조속히' 열자고 다시 요구했다. 조평통은 담화에서 1월 말 또는 2월 상순 적십자회담과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개성공단 회담을 열자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 폐쇄된 판문점 적십자 통로를 다시 열며, 개성공단 경제협력협회사무소 동결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처럼 연초부터 대남 대화 공세를 적극 펴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 대화재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가 재개되어야 금강산 관광이나 기타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북한이 기대하는 경제적 이익과 인도적 지원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월 19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6자회담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1990년대 이후 대남 비방선전에 앞장섰던 조평통이 전향적인 대남 대화 제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분명히 전향적인 사태 진전이다. 하지만 북한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북한이 남북 간 회담을 무조건 개최하자고 요구하면서도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북한의 대남 양면전술을 선불리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신증성을 바탕으로 하되, 북한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판세를 주도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6자회담 재개를 향하고 있고, 6자회담 재개의 사전 정지작업으로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든 6자회담이든 대화의 조건이 성숙되면 우리가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부터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 핵심은 북한이 한국에 행한 무력도발에 대한 분명한 시인·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다. 특히 민간인 희생자가 난 연평도 도발이 대화의 첫 의제가 되지 않으면 대화의 의미가 없다. 우리 국민이 희생당했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 테이블에 가해국과 마주 앉을 수는 없는 일이다. **統**